<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중 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의제는 무엇인지 찾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11개의 단체가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기후위기 의제와 해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입니다. 무분별한 착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다름아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입니다. 남성중심의 경제 시스템은 '성장'과 '개발'만을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은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된 저임금 노동이 되었고, 비인간종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가치와 쓸모가 규정되었습니다. 경제 논리와 이윤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는 주류 남성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과 '노동'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존재, 비인간종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성장'을 목표로 한 잘못된 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핵발전 기반의 에너지 정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폭염, 빈번해지는 산불, 반복되는 폭우와 수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입니다. 지금 당장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체제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구를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무한한 상품 생산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유한한 필요와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는 '탈성장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분업에서 비롯된 '돌봄의 여성화' 탈피, 연령과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입니다. 또한 인간, 비인간종을 모두 포함한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요구안>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국가는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성을 강화해왔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시기에 돌봄의 공공성은 붕괴되었으며, 거주시설의 폐쇄 등 개별 몸들이 제도의 공백을 감당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사회재생산의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자본주의 생산체계는 공적돌봄을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체계를 편성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애, 아동, 노인을 비롯한 '노동'이 불가능한 존재를 배제하고, 제3세계 국가와 유색인종 공동체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발전 생산성을 증대해 왔으나, 증대된 이윤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재생산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었으며,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하위의 노동으로 취급받았다. 동시에 돌봄을 받는 몸들의 무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며 생산성의 몫과 권력을 독점화해왔다.

사회재생산의 탈가족화 - 돌봄의 공공성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돌봄 수행자의 젠더적 성별분리를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노동을 보전하는 역할로의 돌봄 정의를 전복시켜야 하며 배제당한 몸들의 연대와 상호돌봄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 전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상황 속 안정적인 공적돌봄망을 지금 바로 마련하라.
-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가족의 재생산 책임을 토대로 구축된 사회복지체계를 해체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경제성장을 목표로 성과 재생산을 통제해온 현 체제는 기후위기와 재생산의 위기, 돌봄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여성과 소수자, 비인간 동물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고 착취해 왔으며,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질수록 여성들에게는 출산과 양육의 압박과 성적 통제, 돌봄 노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돌봄 위기와 노동력의 공백은 생계를 위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이주노동을 통해 다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가지며,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폭력, 강압, 차별과 낙인 없이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고, 관련한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자원, 기관에도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파괴되는 삶의 터전과 재생산 노동의 착취로 연결되는 악순환은 이와 같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여건을 더욱 불평등하고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삶의 여건들을 현재의 세대와 다음 세대로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재생산정의'를 위한 사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성•재생산 건강 지표를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 중심 인구정책이 아닌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 제도 밖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돌봄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의

자원과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하라.

- 무분별한 유해물질 생산과 사용, 폐기가 인간과 비인간종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감소방안을 마련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한국 정부는 기후대응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여성,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UNFCCC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2017년 젠더주류화를 위한 젠더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역량강화, 젠더균형과 참여, 일관성, 성인지적 이행,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여전히 젠더주류화를 위한 계획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기후재난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과 산업 중심의 소극적인 완화정책과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국가전략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확대될 뿐이다.

구조적 부정의의 결과로 발생한 성차별과 기후위기의 영향은 사회 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 기후재난 발생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적용을 의무화하고 기후재난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하라.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젠더행동계획을 수립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기후위기의 영향은 성별, 성적지향, 인종, 연령, 장애여부, 빈곤,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기후위기로 인해 건강악화를 겪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생계 불안정을 겪는다. 특히나 여성들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기후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반복되는 가뭄과 호우,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일상을 위협받고 거주하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이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며 문제해결의 당사자다. 하지만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들은 형식상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단순히 기후위기 피해자의 정체성으로만 호명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피해자로만 머물러서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체제 전환의 주체로 등장하고, 이들의 구체적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정보 전달체계 등의 조건들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중앙중심의 정책을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겪는 문제와는 괴리된 선언적 정책은 기후위기로 흔들리는 일상을 잡아주지 않는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후정의 원칙과 구체적 대응전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기후재난 피해자·생존자·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기후대응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중앙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구체적인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이행의 과정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공정전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남성', '노동자',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대책에 치중되어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려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한 채로 시도되는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현 정부는 무려 주 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성장 중심 자본주의 체제가 작금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원인이다. 성장을 독려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사적 전가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우리는 자연과 약자를 착취하여 무한한 성장을 통한 이윤을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가 파괴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장 중심의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더 생산하고 더 경쟁하는 성장 중심적 체제에서 벗어나, 환경에도 노동자에게도 해롭지 않은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젠더적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 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성장 중심의 산업체제를 전환하라.
- 에너지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여성 및 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라.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차별 타파와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하다. 축산업은 에너지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다.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과감한 육류소비 감축과 채식 위주의 먹거리 시스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강한 지적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고, 축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심한 소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며, 가축 사료도 97%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영토에 국한해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 적정사육밀도 유지, 사육기간 단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시대착오적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축산업의 대규모 동물 학살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국내 인구의 21배가 넘는 수, 평균 10억 명 이상의 축산피해동물이 인간의 '식욕'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밀식 사육과 강제 임신 및 출산, 생식기 등 신체 부위 절단, 고통스러운 도살 등 폭력적 행위가 축산업 전반에서 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농장과 전시, 실험 등 여러 영역에서 지각 있는 생명인 동물을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착취, 학대해 온 결과 모두의 안전과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빠르게 덮쳐오는 기후재난 앞에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동물 학살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장식 축산과 종차별을 철폐하라.
- 지역 분산적인 생명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대하라.
-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를 살리는 상호 돌봄 체제를 구축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은 빠른 핵발전 확대와 느린 석탄발전 감소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할 석탄화력발전소는 서울, 경기와 인접한 인천과 충남에 집중되어 61기가 가동 중이지만, 삼척블루파워 2기가 추가로 신규 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연간 1,28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할 삼척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전력사용량의 2배를 생산하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예정이다. 핵발전소 역시 영광 및 부울경 지역에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현재 25기가 가동 중이며, 울진과 울산에 3기가 건설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검토를 공식화 하고,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역시 졸속으로 밟고 있다. 기후재난 시대, 중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는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멈추지 않는 석탄발전과 폭주하는 핵발전은 지역과 다음세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은 주민의 호흡기 질환을 불러왔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의 몸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 발전소에서 중앙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초고압 송전탑 역시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발전으로 대두되는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은 현재 기후위기를 불러온 부정의에 그 뿌리를 둔다.

우리는 단순한 발전원 변경을 넘어, 수도권 에너지 자립과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확대를 요구한다.

- 착취적인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하라.
- 기후위기 시대의 상식적 요구다! 석탄발전 중단하고, 탈석탄 법제화하라.
- 수도권 에너지 자립과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확대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폭우에 잠기는 반지하, 폭염에 달아오르는 불법건축물, 한파에 얼어붙는 쪽방, 화재가 나도 탈출할 수 없는 고시원, 늘어난 해충과 곰팡이로 건강을 해치는 집에 사는 이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다. 그러나 국가는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을 밀어 없앤 뒤 고가 민간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을 독려하고, 공공부지마저 민간에게 영구히 팔아넘긴 뒤 더 많은 상업부지와 아파트를 짓는 도시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이들과,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국가는 오히려 주거빈곤과 기후위기를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야 하고, 이 때의 주거비는 가난한 이에게도 부담가능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를 주거권이라 말하며, 국가는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을 기준으로 주거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는 매입임대, 그 권한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공공선매권의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당장 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들이 겪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근절하고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병행해야 한다.

- 기후위기시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
- 공공부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선매권 도입, 매입임대 공급 등을 통해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라.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이 불가피할 경우 민간 아닌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의 공공성 강화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2020~2022년 식량 자급률이 평균 20% 아래를 기록한 한국에서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후재난 시대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농민들의 주체성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여성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업 공동체의 핵심 노동자이자 돌봄자였으며 토종종자를 지키는 보존자였으나 가부장적 농업사회 속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가 경영주는 남성 농민이며, 이에 따라 여성 농민은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단일 경작 농법에 기반한 산업형 농업은 개량된 종자,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고안되어 거대자본의 이윤을 불릴 뿐 아니라,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스마트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프레임 아래 대기업들이 농업생산 분야까지 장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토종 종자를 지키고, 생태적인 농법을 유지하는 농민들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과 산업 중심의 해결책에서 벗어나,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물다양성과 식량주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 기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 농업, 스마트 농업 육성을 멈추고 지역 중심의 농생태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 기후위기 시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2021년 GDP 10위에 이르는 등 부유한 공업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가부장 식민주의에 시달리고 지배당하는 고통의 역사를 지나왔으나, 동시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30만 명의 한국군을 파병해 외화벌이를 이루고자 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나, 같은 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였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명분삼아 생태학살을 수출하는 경제개발-식민주의 국가를 재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아시아 각지에 석탄발전소와 핵전소를 수출하여 건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남반구를 대상으로 한 착취와 화석연료로 추동해온 산업문명의 역사를 성찰하지 않고 되려 이어가는

행보이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보호받을 위치가 아닌 기후채무국의 지위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손실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뿐만 아니다. 신체·정신·감정적·사회적 건강, 자연환경과 함께 연결지어 사는 삶의 방식, 생태계의 다양성, 삶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 지역문화와 문화유적들, 토착지식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피해와 손실도 포함된다.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와 손실의 최전선에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 있다.

그동안 국가가 자행한 신자유주의, 성장 중심, 기업중심 세계 체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ODA)로 대표되는 국제개발협력이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화' 되는 것에 반대하며, 한국정부가 진행/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전지구적 기후정의 실현이 목표로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페미니스트 관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마련하라.
- 국제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수립과 기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작성: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